

“개인정보 침해 빅브라더법” vs “빅테크 감시 소비자보호”

〈한은〉

〈금융위〉

금융 이슈리포트

전자금융법 개정안 논란

한은 “개인정보 남용 우려” 지적
금융위 “소비자보호 장치 일뿐”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 공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빅브라더(사회통제)’ 논쟁으로 번졌다. 한국은행은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빅브라더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두 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 가능성”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학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5일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 제36조 9항이 빅브라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36조 9항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법령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포인트를 통한 구입 시 모든 거래 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넘어가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면서 정보남용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중국(디지털 지급 청산 기구 ‘왕렌’)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으며,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은은 국내 법무법인 2곳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A법무법인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산기관이 보유하는 내부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개정안에서 빅브라더논

란이 발생한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금융안정·소비자보호 위한 장치”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 빅테크를 통한 금융거래의 실시간 감시체계가 부족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에 대한 청산 업무를 금결원에 맡겨 빅테크가 보유한 충전금 등의 내부 자금화를 막아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입장문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개정안을 통해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돈의 주인을 알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결원에서 기록을 다 받더라도, 금결원 직원이 함부로 들여다보면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지금도 자금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기록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관장한다”며 “그 얘기는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열린 전금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이 참석해 중국도 내부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은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이자 전자금융업자·제3자 지불기관에 대한 감독자”라며 “그 두 기능을 가지면서 은행들이 100%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고, 200여개 빅테크·핀테크까지 인민은행에 예치하는 시스템으로 중국의 입법 태도는 은행 수준의 규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가 개정안에 담고자 한 내용은 은행 만큼의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 모두를 은행 방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분식회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지는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 나아가 외부청산기관을 없애기보다는 외부청산기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통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래가 많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중간단계를 거쳐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청산 기관을 문제 삼기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KB국민銀, 기보와 ‘한국판 뉴딜’ 지원 협약

뉴딜 선도 기업 상호 발굴·추천
KB국민銀, 기보에 100억 특별출연
우수인력 채용지원 등 특화서비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기업의 상호 발굴 및 추천을 통해 양 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디지털 뉴딜 기업 ▲그린 뉴딜 기업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 혁신기업 등 안정망 강화 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 지역균형 뉴딜 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금리우대와 보증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식에서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료지원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회계 컨설팅, KB굿잡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KB금융그룹 간 협업을 확

용해 K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이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KB증권의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회사채 발행 관련 업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개인정보’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금감원 Q&A

Q. 얼마 전 딸에게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 알고보니 딸을 사칭한 문자였는데. 이게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가?

A. 과거에는 가족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소액자금을 급히 송금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자로 부모에게 접근하며, 휴대폰이 고장·파손으로 인해 수리 중이라며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에 추가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모 명의로 인증을 받아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계좌 번호·신용카드 번호·원격조종 앱 설치 등을 요구해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결제합니다. 또한 탈취한 신분증 등을 활용해 휴대폰 신규 개통, 신규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이체해 편취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칭하다보니 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쉽지만 모르는 번호로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가 오는 경우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이영석 기자

우리금융, 인재 육성 위한 특성화고 멘토링

우리FIS 직원, 전문 멘토 참여

우리금융그룹이 디지털 인재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취약계층 특성화고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육성 프로젝트

는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디지털·IT 기술 학습을 위한 진로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성화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빅데이터, AI,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수강권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의 ICT서

비스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의 현업 직원들이 전문 멘토로 참여해 디지털·IT 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 배양 멘토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멘토링 교육은 빅데이터·보안·API·웹개발·인공지능 등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실무능력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우리에프아이에스에서 근무 중인 선배 직원이 참여해 실시간 채팅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영석 기자

캠코, ‘기업연계지원 조정협의회’ 신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기업연계지원 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소 회생기업 등 지원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다.

캠코는 부실징후기업과 회생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기업구조 혁신지원센터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

회생기업 신규자금 지원 ▲자산매입 후 임대 지원 ▲동산담보금융 지원 ▲담보부채 발행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설된 협의회는 캠코가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상호 연계해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지원한다.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백지연 기자 wdus0248@